

삼성, 테슬라 AI칩 생산 임박… 파운드리사업 보폭 넓힌다

美 테일러 공장 EUV 장비 시험가동 본격 생산 앞두고 첨단공정 수요 확보 수의 개선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앞두고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험 가동에 착수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5 칩 생산을 앞두고 선단 공정 준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파운드리 사업 반등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월부터 테일러 1공장에 EUV 노광 장비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식각·증착 장비를 차례로 들여와 올 하반기 본격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전망인 테슬라 차세대 AI칩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테일러 패밀리 중심으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로 첨단 공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일러 공장은 2나노(nm·10억분의 1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의 핵심 생산 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 7월 23조원 규모의 테슬라 차율주행 칩 AI6 수주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나

노급 선단 공정을 통해 테슬라 AI5와 A16 칩을 생산할 것으로 계획이다.

특히 최근 테슬라가 AI5 칩의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반등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본 마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며 “AI6 칩(설계)도 초기 단

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머스크가 차세대 AI칩에 대해 ‘세계 최대 물량’과 ‘9개월 단위 설계 주기’를 공언하면서 업계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AI5 물량이 TSMC에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삼성이 담당해야 할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I3·A14의 개발·양산 주기는 그간 3년 가량이 소요됐으나 AI5부터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이미지센서도 수주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5 칩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을 합친 비메모리 부문에서 지난해 6조원 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같은 수주 확대 움직임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용 삼성전자 회

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출장에서 머스크를 만나 포괄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AMD, 메타, 인텔, 웰컴, 버라이즌 등 주요 빅테크 고객사 CEO들과 연쇄 회동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차세대 AI칩 설계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 9개월 수준의 양산 주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AI5는 TSMC와 삼성전자가 함께 맡기로 한 만큼 물량이 일정 부분 분산될 수는 있으나 특정 업체가 물량을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로 선단 공정 중심으로 수율과 고객 신뢰도가 개선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며 “EUV 공정이 선단 노드에서 활용되는 만큼, 테슬라 AI 칩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재경부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조세특례한법 등 개정 추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 신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시 최대 4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 성장전략’에 담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처다.

오는 6~7월경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 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한다.

특히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 원 미만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단,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등 해외주

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가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이 이 같은 특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경제계 “3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개선 논의해야”

경제 8단체,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과 배임죄 개선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 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년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승인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인 여부에 따라 중장기 경영 전략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정기·임시 주총이 반복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승인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 유예 후 1년 이내 소각 규정을 완화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소각뿐 아니라 처분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

대출 규제·공급 감소 등 영향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준월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든 데다 강도높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자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1~11월)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1~11월 기준) 43.3%에서 ▲2022년 51.8% ▲2023년 54.8% ▲2024년 57.4%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KB부동산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5년 들어 전월세 매물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사라진 순수 전세의 자리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전월세가 대신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

세의 경우 외국과 같은 순수 월세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한 반면 준월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준월세 비중은 작년 55%까지 확대된 반면 전세 성격이 강한 준전세 비중은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속에서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 및 세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세·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라며 “입주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계약 구조에 놓이고 있다”고 밝혔다.

준월세 보증금과 월세 모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지난 2022년 각각 9943만 원, 128만 원에서 2025년에는 보증금이 1억 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의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